

여야 '탄핵검사 4명' 처리 놓고 긴장 고조

민주, 내일 법사위 열어 조사계획서 채택 방침 장경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각각 열릴 것” 국힘, 국회 윤리위 제소...직권남용죄 고발 검토

야권이 탄핵소추 검사 4명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을 상대로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직권남용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원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만큼 해당 검사들이 청문회 등에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과 같은 강제력 행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청문회도 열 생각”이라며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지만 실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또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관련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별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본격화하는 데 맞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직권남용

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라며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탄핵인데도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비대위원은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쌍검을 휘두르는 조폭 행동대장”이라고 비꼬았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수사 검사를 모두 탄핵한다고 해서 사법리스크가 증발하지는 않는다”며 “검찰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

與당권주자들 “집안싸움 안돼” 한목소리

●국민의힘 호남·제주 합동연설회

韓 “인신공격·비방 내부 총질”...元 “팀화합 못이끄는 대표 위험”
羅 “사사건건 총돌·눈치보면 안돼”...尹 “줄세우기·계파정치 폭망”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의 화합과 건강한 당정 관계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쟁자를 향해 “내부 총질”, “팀워크 저해”, “사사건건 총돌”, “줄 세우기” 등 표현으로 공격했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염두에 둔 듯한 신경전도 오갔다.

한동훈 후보는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나.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 당대회에서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나.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배신자’ 프레임에 이어 김 여사 문자 논란 등을 계기로 자신을 공격하는 원

리후보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 후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원희룡 후보는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며 “최악은 집안싸움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 국민들에게 버림받는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잘못된 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대통령과 토론하고 설득하겠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해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는 “국민의힘이 못한 모습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다.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치고, 줄 세

우고 줄 서고, 절대 안 된다”고 한 후보와 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 후보는 “다 같이 말하는 전당대회인가, 흥하는 전당대회인가. 갈라치기 전당대회인가, 하나 되는 전당대회인가. 나경원은 국민의힘을 하나로 하겠다”며 “사사건건 총돌하는 당 대표,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당 대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지난 총선의 궤멸적 참패 이후에도 우리는 변화의 몸부림 없이 공동묘지의 평화 속에 사실상 죽어있다”며 “우리는 반성하지 않는 당의 모습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우리 당의 비겁한 행동에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윤심이 되는 국민 정당을 만들겠다. 우리 당을 ‘폭망’하게 만드는 것은 썩은 기득권의 줄 세우기와 계파정치”라며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을 폭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양부남,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원천 차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사진)은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 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신고액(금

융감독원 자료)은 2023년 1천359억원으로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액이 1천300억원에 달해 전체 신고액의 6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의 임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특성 상 이미 수차례에 걸친 자금 인출이 이뤄진

이후 임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등 신속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부남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들이 1천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 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조계원,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 확대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사진)이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과 확대를 제안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비 지출 공제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9년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문구독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와 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제한을 1억원으로 완화하고 공제율 30%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울러 영화, 문화상품 구입, 여행숙박, 체육 등 순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문화산업 활성화인지, 국민 문화향유 확대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 전 반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